

안전성 보강 골격 유지...논란 이젠 끝내야

옛 도청별관 보존 정부 최종안과 반응

5·18 역사성·전당 컨셉 동시 만족 대책위 "반대" 시민단체 "고민 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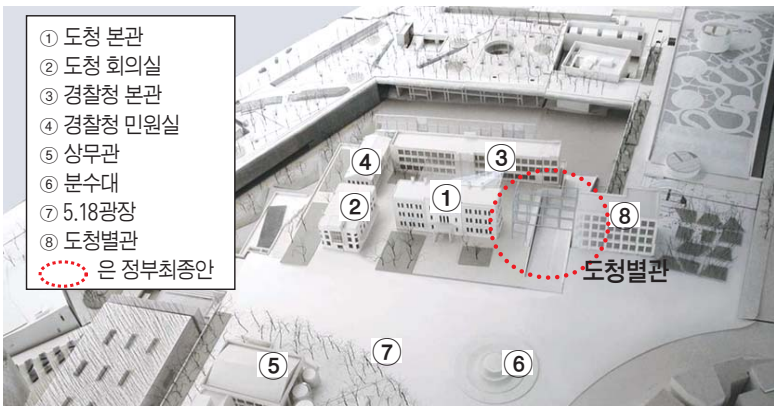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23일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과 관련 '정부 최종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별관 전체 54m 중 애초 보존하기로 한 30m 이외에 철거대상이었던 24m의 골격을 유지해 '장소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본 개념인 '개방'과 '소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추진단의 판단이다. 광주시와 추진단은 지역 내 여론의 추이를 살피 예정이지만 2014

년 개관 예정인 전당의 전체 설계와 조화 및 추진 일정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진보단체로 구성된 '5·18 사적지 원형보존을 위한 시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철거 대상 24m 골격 살려=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방안은 옛 도청 별관 54m 중 철거 대상인 24m의 골격을 유지하고 여기에 강구조물을 덧붙인다는 것이다. 벽면과 지붕 등을 철거하고 남은 철근 뼈대에 특정 재질을 덧붙여 공간을 살리려 형태는 존속시키겠다는 이 방안은 최근 외국에서도 그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보존 필요성이 높은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기존 건축물이 그 용도는 다했으나 다만 역사성과 장소성을 위해 존속해야 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라며 "전문 용어로는 스캐폴딩(scaffolding)이라

■아시아문화전당 및 도청별관 배치도



* ①~⑦: 보존과 활용, ⑧: 도청별관 상징적 보존, 안전성 활용 불가

고 하며 포스트모던 건축양식 중 하나로 신규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이 방안이야말로 5·18 정신을 살리고 동시에 전당의 기본 컨셉과도 조화를 이룬다"며 "광주에서 대책위의 의견을 들이 제정한 연결동로 방안은 옛 도청 별관이 안전진단 B등급으로 사용이 불가능한데다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어 전당의 전체적인 배치와도 부조화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옛 도청 별관 보존을 위해 별관 뒤에 들어설 어린이식문화원 자리 35m를 질러내 축소했다.

◇대책위 '타무니 없다'vs 시민단체 '고민 담겼다'=이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종안'은 5가지 요소를 감안해 구상됐다고 밝혔다. ▲세계적 복합문화시설 지향 ▲2014년 전면 개관 ▲전당 내 신축건물과 5·18 관련 건물 간 조화 ▲관람객 안전 최우선 ▲옛 도청 별관, 민원실 등 7개 보존 시설은 리모델링해 사용하며 옛 도청 별관은 상징적 보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날 오후 15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추진단의 방안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옛 도청 별관 문제 때문에 전당 개관이 늦춰지는 것은

안타깝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협할 수 없는 문제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다음주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역시민단체들은 추진단의 안에 '찬성'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추진단이 고민을 담아 내놓은 안이라고 본다"며 "더 이상 전당 건립이 미뤄지면 그 문화복합시설의 의미도 퇴색하기 때문에 전당을 설립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관 문제 해결되면 2012년 부분 개관=추진단은 옛 도청 별관문제가 해결되면 2011년 5·18 관련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와 논의해 전문연구기관에 향후 이용방안을 연구하며 기본 설계 과정에서 10여 차례 이상 공청회를 거쳐서 등 콘텐츠와 관련 범시민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는 게 추진단의 복안이다.

추진단은 또 옛 도청 별관 24m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붕 및 벽면 등의 철거를 위한 설계를 내년 초에 발주하고 내년 중에 전체적인 공정을 30% 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돌아온 이순신 장군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이 40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우뚝 섰다. 작업장이 있는 경기도 이천에서 저진동 특수 차량에 실려 이날 새벽 2시에 광화문광장에 도착한 이순신 장군 동상은 5시간의 설치작업 끝에 원래의 자리에 안착했다. 해군 의장대가 시범을 보이는 동안 암녹색의 위엄있는 모습을 드러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지난 40여년간 그랬던 것처럼 의연한 시선으로 다시 서울의 아침을 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람객 16만 흥행 성공 빛 어떻게... 후폭풍 걱정

회고 2010

8 F1대회 부실 논란

#1. 23일 오전 전남도의회 분회 의장 정우태(장흥 2·민노)·유현주(비례·민노)·도의원이 'F1은 전남재정 파탄', 'F1 대회 진상규명이 우선이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장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정민(보성 1·민노) 의원은 윤시석(장성 1·민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2010 제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88개국 중계, 전남 국제화 자신감 수천억 쏟아붓고 수입 165억 그쳐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F1 대회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남도가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건설 지원비로 편성한 312억을 포함한 5조5523억 규모의 '2010 제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비슷한 시각, F1대회 관련 의혹과 실제에 대한 범도민진상규명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는 F1조직위원회가 있는 전남개발공사 사빌딩 앞에서 "철저한 감사로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곳에서는 F1 대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었다. #2. 주동식 전남도 F1대회지원본부장은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국내 최초로 열린 대회

에 16만명이 넘는 관중이 몰리고 F1 대회 개최에 따른 직접적 생산 유발효과가 1조956억원에 이른다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자료 등을 들어 적지 않은 수확을 거둔 대회로 평가했다.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지역민의 시각은 관이아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제화 물고 뜬 역사적 이벤트'='지구촌 최대의 자동차 축제'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지난 10월 22일부터 3일간 영암에서 국내 최초로 열렸다. 대회조직위원회는 3일간 관람객이 모두 16만5000명에 달하는 등 '관중몰이'에는 성공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도 F1 대회 개최로 국가 브랜드 가치 및 지역 이미지 상승 등 5조 8368억원의 간접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F1 대회가 전 세계 188개국에 중계되는 동안 6억명의 전 세계 시청자에게 영암과 목포, 전남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향후 서부권 일대가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도 마련됐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교통·숙박 등이 열악한 지방에서도 세계적인 국제 대회를 충분히 치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고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국제적인 모터

스포츠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점도 적지 않은 수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쟁이 적자 '돈먹는 하마'=F1 대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수익 창출면에서는 '참패'했다. 경주장 건설비 3400억원에 추가 공사비 1025억 등 수천억원의 국·도비를 쏟아부었다. 경주장 건설 외에 대회개회권료(sanction fee·360억), FOM의 중계권료(147억)도 냈고 운영비도 100억원이 넘게 썼다. 이렇게 들어간 돈만 842억원. 그런데도 수입은 165억에 그쳤다. 타이틀 스폰서는 커녕, 메인그랜드스탠드 위에 마련된 기업부스 판매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경주장 서킷을 둘러싼 벽에 붙은 광고도 찾아보기 힘들고 16만명의 구름 관중은 공짜표와 자유이용권이 수만장 뿌려지면서 가능했다는 게 공공연환 비밀이다. 경주장 건설 지연에 따른 부실 공정 관리에 대한 책임론도 여전하다. 전남도 F1 대회지원본부와 KAVO는 '대회 전 경주장 완공'을 공언해놓고도 대회 개최 때까지 경주장을 완공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KAVO와 전남도가 불협 화음으로 각 부서간 정보 공유와 원활한 업무 분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관람객들에게 돌아오는 등 '관람객들의 불편을 담보로 한 성공'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첫 대회 개최 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총체적 부실' 논란으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끝>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신축에 광주·전남 건설업체가 참여합니다.

- 15개 기관 신축비용 총 9,673억원중 광주·전남 건설업체가 4,000억원 정도 수주 가능

- 광주광역시와 건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1호 개정)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사옥

우정사업정보센터 신청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